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는

금융권 방역에서부터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회사채·단기자금 등 금융시장 점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금융리스크 전반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29차 회의입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 금융대응 방안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손병두 전 부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제기해주신
금융권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2017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DSR 도입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첫 번째 주재하는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안건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규제 유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해
서민·소상공인의 생계애로 완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7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은행권에 자율적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차주에 대한 DSR 산정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大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그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초과 및 90%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고위험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대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11월중 가동하여
현재 적용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사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즉각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여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드맵 시행의 속도와 범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마무리말씀]

작년 5월, IMF는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 IMF('19.5.), 「Republic of Korea,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그동안 한국 정부가 LTV, DTI, DSR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적절히 운영해온 결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키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비, 한은) : (17.2Q) 11.6% ('18.2Q) 7.5% ('19.2Q) 4.3% ('20.2Q) 5.2%

앞으로도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자금, 전세자금 등
실수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업권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은행은 지난 9월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성 목적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사업자금 공급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